

다산포럼



이남주
성공회대 인문융합자율학부 교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1월 7일 국회 답변 중 타이완 해협 봉쇄 사태를 ‘존립위기 사태’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무력충돌이 수반될 경우 ‘존립위기 사태’로 볼 수 있다고 답변한 이후 중·일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 발언을 강하게 규탄하고 자국민에게 일본 방문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사태 수습을 위해 11월 17일 가나아 마사야키 외교부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측 파트너인 아시아 국장 류진송과 회담했으나 중국의 반응은 싸늘했다. 대화 내용보다 두머리에 손을 넣은 류진송 앞에 마사 야키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진이 더 주목을 받았다.

사나에 총리는 11월 22일 남아공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 국무원 총리 리창과 대화를 모색했으나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리창은 사나에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2026년 1월 일본에서 진행될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담에 불참할 것이라는 입장에 밝혔다. 중국의 강한 반발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기고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전 국회의원

지난 10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만·관 합동회의에서 삼성전자, 현대차, LG, SK 등 우리나라 4대 그룹 총수들이 향후 5년간 국내에 14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 회의는 한국 대기업의 향후 글로벌 전략과 산업 방향을 가능하는 국가적 회의였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메시지는 일상적인 정책 언급이 아니라 한국 경제가 당면한 구조적 위기와 산업 전략의 변화를 요구하는 깊은 통찰이 담긴 발언이었다.

지금 한국 반도체 산업은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어 여러 위험 요소를 갖고 있다. 평택·화성·이전 등 주요 반도체 산단은 북한과의 물리적 거리상 지정학적 취약성에 놓여 있으며, 이는 반도체가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임을 감안 할 때 매우 중요한 문제다. 또한 반도체 제조는 엄청난 전력과 물을 필요로 하는데 수도권 인근에 집중되면서 에너지와 용수 공급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 2021년 대만 TSMC가 극심한 가뭄으

기고



강정희
전 중학교 교사·소설가

“뭐라고? 독서·마라톤? 책을 읽으면서 달리기를 한다고?”

“아니, 그게 아니고…”

여러 기관에서 야심차게 운영하는 독서 캠페인 이름이 그렇단다. 세상에. 마라톤은 페달랑이 크고(많고) 허벅지에 울퉁불퉁 근육을 가진 선수들이 몇 달씩 단련하고 출전하여 기록을 재고 순위를 겨루는 대회가 아닌가. ‘독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이라는 비유는 익숙한 데, 마라톤이라… 그래, 길게 오래 많이 읽자는 뜻이겠다. 그러면 여순을 바꾸어 마라톤독서라고 해야 하지 않나. 아무튼, 운동에 흥미가 없고 체력도 좋은 편이 아닌 나는 듣기만 해도 숨이 차고, 둔한 두 다리가 노곤해진다.

여러 학교에서 운영하는 독서마라톤에서는 책 1쪽이 1m란다. 학년 초 코스별 목표를 정하고 읽은 쪽수와 소감을 해당 홈페이지에 규정대로 기록하여, 연말에 심사를 통과하면 완주증을 받는다. 11월 이즈음은 행사가 마무리되는 시기다. 곧 학교별 학급별로 통계와 순위가 공개된다. 교실 분위기는 어떨까. 책을 읽다가 여백이 있는 면이 나오면 감탄사를 외치는 아이가 있다. ‘앗싸, 오예!’라고. 글이 적어도 1쪽은 똑같이

중·일 갈등, 어디까지 갈까

일본은 1999년 주변사태법을 제정하며 본토 방어 이외의 사태에도 자위대가 미군 지원을 명분으로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 주요 내용 중 하나가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미군이 적대국의 공격을 받게 되고 그 상황이 일본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황을 ‘존립위기 사태’로 규정하고 이때부터 자위대는 집단적 자위권을 통해 무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그 동안 어떤 사태를 ‘존립위기 사태’로 볼 것인가에 대해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그런데 사나에 총리가 타이완에서의 무력충돌 사태를 존립위기 사태로 본다고 밝힌 것이다. 주변사태법의 내용에 따라 이는 일본이 타이완 문제에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미국도 타이완에 대한 군사개입과 관련해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을 침략하고 타이완을 식민지로 편입했던 역사를 가진 일본이 타이완에 군사개입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셈이다.

일본에서 이처럼 침략 역사에 대한 인식 없이 주변 지역 문제와 관련한 발언이 반복되는 것은 우리에게도 우려스러운 일이다. 더욱이 역사적 감정과 현재 타이완 문제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로서 사나에의 이번 발언은 묵과하기 어렵다.

문제는 앞으로 중일 갈등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있다. 사태 직후 중국에서는 일본에 희토류 수출 규제 등 더 강한 제재를 가하고 타이완 문제에도 더 강경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중국 정부도 원칙적으로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여러 사람이 나서 정부의 종래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식으로 사태를 가라앉히고자 하나 중국 정부는 발언 철회가 없는 한 일본의 설명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진핑은 11월 24일 트럼프와의 전화 통화에서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과 중국이 군국주의에 맞서 싸운 역사까지 언급했다.

그러나 물리적 제재 등이 추가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사나에의 발언이 평소의 정치성향을 반영한 것이지만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단정하기는 이른 면이 있다. 일본 여당 내에서도 신중하지 못했던 발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그리고 일본과의 갈등 강도를 높여 전선을 넓히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를 안정화시키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진핑은 미국을 통해 타이완 문제를 안정화시키는 길을 택했고 트럼프도 일단 이에 호응하고 있다.

일본이 추가적 자극을 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현재의 냉각 사태를 유지하며 일본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한국도 중일 갈등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 문제가 한중 관계나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타이완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지도 다시 확인시켜주었다. 타이완 문제를 포함해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무력충돌을 가정하는 발언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한중 관계에서 수면 아래 남아 있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문제가 타이완 문제 등과 연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 이제 광주로

로 몰탱크 트랙을 동원했던 사례는 충분히 참고가 될 만한 경고다. 여기에 수도권 지가 상승으로 인한 산업 단지 조성의 어려움, 지방 제조업 기반 붕괴와 지방소멸 가속화 역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다.

이제 대한민국은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생태계를 다변화하고 지정학적·에너지·부지 리스크를 동시에 해결할 새로운 전략적 거점을 확보해야 한다. 그 해답은 바로 광주다. 광주는 지정학적으로 유리하며 영산강과 황룡강이 제공하는 풍부한 용수와 영광원전, 전남의 해상풍력·태양광 등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이 있어 반도체 팹 운영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를 고루 갖추고 있다. 산업용지 가격 역시 수도권보다 저렴하여 경제성이 높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광주는 국가 AI데이터센터를 전국 최초로 구축하였고 AI데이터센터에는 반도체 테스트·검증, 자율주행, 에너지 실증센터가 있어 광주 반도체와 AI 융합 생태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있다. 이는 단순한 인프라 수준을 넘어 향후 ‘AI 반도체 시대’를 대비할 국가적 자산이자 기업 투자 유치를 촉진할 핵심 경쟁력이다.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수요 폭증으로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국가 경쟁력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지금, 만약 광주에 이 클러스터가 조성된다면 그 파급효과는 실로 막대하다. 직접 고용 5000명 이상, 협력사·서비스 산업 등을 포함한 간접 고

용 2만명 이상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부가가치는 2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 서울·수도권으로 빠져 나간 청년 인구 기술 인력들이 다시 광주로 유턴함으로써 호남의 고급 감소 흐름도 반전시킬 수 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넘어 대한민국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성과 국가적 회복력을 높이는 전략적 선택이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지역균형발전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산업·인구·안보 전략이다. 정부와 광주시는 지금 분명한 과제 앞에 서 있다. 광주 반도체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 수 있도록 법인세·취득세 감면 등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정책 금융 지원과 R&D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기업의 투자 부담을 줄이고 정부·지자체·산업계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

광주에 반도체 기업이 들어선다면 이를 중심으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집적된다. 확장된 광주 AI데이터센터는 세계 최고 수준의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며 미래 모빌리티 클러스터는 자동차 반도체 수요를 흡수한다. 광주는 청년들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기회가 몰려드는 혁신도시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결단과 실행이다. 광주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 수 있도록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독서마라톤, 팬참지 않습니다

1m이기에. 자, 이 장면에서 아이들에게 내면화되는 가치는 무엇일까.

시간 낱파 전화번호 돈, 모두 십진 숫자로 표시되는 개념이다. 하지만 세상에는 수지로 정량화할 수 없는 것도 많다. 독서왕이라는 이름으로 다독상을 주면 아이들은 권수를 늘리기 위해 두께가 얇고 그림이 많은 책을 고른다. 물론 도서관에서 여러 권 대출한 후 읽지 않고 반납하면 자동으로 다독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상의 명칭을 바꾸어 ‘다대출상’이 생기기도 했다. 아, 상이란 무엇인가?

도서관 몇 권을 정해 퀴즈대회나 골든벨을 하면 아이들은 문제로 나올 법한, 단편적 지엽적인 것을 찾아 메모하여 외운다. 독후감 대회를 하면 인터넷을 뒤져 글을 완성해 온다. 물론 상에 욕심이 있는 일부 아이들이 그렇다. 욕심이 없는 일부 아이들은 포기하고 외면한다. 책에서 점점 아스라이 멀어져 간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칭찬, 인정, 수상, 보상 등이 행동의 동기가 될 때 숭고한 취지는 사라지고 공허한 껍데기만 남는다. 미터로 환산된 쪽수와 권수, 지정된 글자 수의 소감으로 완주를 심사받는 과정을 염려한다. 한편 도서관 학부모 자원봉사자는 학교평가를 위해 바코드 리더기로 학생의 도서 대출 반납 건수를 부풀리기도 하는 게 현실이다.

어떤 책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며 자신의 세계관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아는 과정이 배움이고 성장일 터이다. 부모와 교사와 사회가 펼쳐주는 대로 흡수하고 수용하는 유소년기는 밀도와 비중이 높은 시기이다. 작가 울터스 허슬리가 ‘맛진 신세계’에서 그린 미래사회에서 책과 꽃에 대해 언급한 유아 조기교육 장면은 섬뜩하다.

社說

5·18 주범 ‘죽어서도 호사’ 국립묘지법 개정을

며칠 전 5·18기념재단이 국립 대전현충원에서 마련한 ‘5·18 역사왜곡 대응 현장 탐방’은 여러모로 의미있는 행사였다. 40여명의 참관단과 함께 대전현충원을 찾아 12·12 군사반란과 5·18 진압 주역들이 안장된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는 자리였다.

군사반란과 5·18 학살 주역들이 버젓이 국립 현충원에 편히 누워있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설마 그들이 있을까 생각하겠지만 현장은 죽어서도 호사를 누리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다.

‘광주 학살 5직’의 한 명으로 5·18 당시 20사단장을 지낸 박준병의 묘비에는 가쪽이 쓴 ‘지장·덕장으로 일생 국가에 헌신 하시고…’라는 어처구니 없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도청 진압작전을 직접 수행한 소준열 계엄본소장과 전두환에게 유혈 진압을 건의한 진중채 제2군 사령관 등 광주 시민들을 학살한 5·18 진압 주범들도 볼 수 있었다.

국립 현충원의 아이러니한 현실은 12·12 당시 반란군에 맞서 싸운 ‘참군인’ 장

태완 장군과 반란군 조력자인 정도영 보안사령부 보안처장이 나란히 묻혀 있는 데서 확인할 수 있었다. 참관단은 죽어서도 국립묘지에서 호사를 누리고 그 후손들까지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는 현실에 분노가 끓어 오른다고 입을 모았다.

대전현충원은 대한민국 국립묘지의 현실이자 청산하지 못한 역사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1979년 12·12 군사 쿠데타를 제대로 응징하지 못해 이듬해 5월 광주 학살을 불렀고 46년이 지나 지난해 12·3 비상계엄으로 이어졌다.

5·18기념재단의 이번 행사는 국립묘지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쿠데타나 내란 가담자를 형세를 들어 국립묘지에 안장하게 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해 서훈 박탈과 파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당장 법 개정이 힘들다면 그들의 역사적 과오와 행적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설명문이나 안내판 정도는 설치해야 하지 않겠는가.

2차 공공기관 이전 광주전남 상생 정신 살려야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시점 2에 대비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대상 기관이 157곳이다. 아직 구체적인 대상 기관이 나오지 않았지만 광역 자치단체 간 유치 경쟁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광주시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인공지능(AI)과 그린에너지, 미래차, 문화복지 관련 기관 유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전남도는 농업·수협 중앙회와 한국공항공사 등 7개 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해당 기관을 직접 찾아가 설득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실시한 공공기관 1차 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의 성공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지역별로 혁신도시를 조성해 수도권 공공기관을 이전함으로써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완화하고 좋은 일자리 창

출이라는 성과를 냈다. 당시 광주시와 전남도는 나중에 빛가람혁신도시라는 전국 유일의 공동 혁신도시를 조성해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 등을 유치했다.

빛가람혁신도시의 정신은 ‘상생’이다. 상생 모델로 성공 신화를 쓴 만큼 이번에도 광주시와 전남도는 ‘원팀’으로 시·군 2에서도 성과를 내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나주 혁신도시에 우선 유치한다는 대원칙을 정하고 희망기관 교통정리도 마친 상태라고 한다. 협력을 통해 상생한다는 빛가람혁신도시 정신을 지키겠다는 전략은 옳은 방향으로 잘 잡았다.

다만 시·군 2가 정부의 ‘5곡 3특’ 전략과도 맞물려 있는 만큼 광주시와 전남도의 공동사업을 추진하게 될 초광역 행정협의체인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출범이 자질을 빚지 않아야 한다. 전남도의회가 시·군 2의 결집률이 되지 않도록 출범에 적극 협력하길 바란다.

無等鼓

독일 베를린을 찾는 여행객들 사이에 알려진 체임 프로그램으로 ‘슈틀퍼스타인’(Stolperstein·걸림돌) 찾기가 꼽힌다. 고개를 숙이고 길바닥을 뒤지다 ‘슈틀퍼스타인’을 찾아낸 뒤 사진을 찍는 여행객들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독일어로 ‘걸려 넘어지는 돌’이라는 의미지만 땅에 묻혀 있어 걸림 일은 없다. 슈틀퍼스타인은 베를린 출신작가 군터 덴니히(Gunter Demnig)가 나치 정권에 의해 자행된 유대인 학살에 대한 반성과 추모를 위해 1992년부터 시작한 프로젝트다. 가로·세로·높이 각 10cm크기의 ‘걸림돌’에 는 희생된 유대인 이름, 출생, 끌려간 해 등이 새겨져 독일을 비롯해 폴란드, 오스트리아 등 희생자가 마지막으로 살았던 집이나 직장이 있던 곳에 수만 개 설치됐다. 역사의 흐름 속에 흔적 없이 희생된 ‘개인’의 존재를 기억하고 디딤돌 삼아 비극적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의미가 담겨있다. 광주에서도 지난해 헬리콥터 사격(기총소사) 흔적이 남아있는 ‘전일빌딩 245’와 5·18 역사를 담고 있는 5·18 기록

관을 둘러보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5·18 국립묘지, 민주광장 등 국가폭력의 흔적과 저항·연대의 상징적 공간들을 돌아보며 광주의 오월을 기억하자는 취지였는데 처음으로 ‘다크투어리즘’이라는 이름으로 열렸다. 다크투어는 전쟁이나 재난, 학살, 참사 현장 등 비극적인 역사 속 장소를 돌아보며 사건의 어두운 면을 잊지 말고 성찰의 계기로 삼는 활동이다. 국회사무처가 비상계엄 해제 1주년을 맞아 3~5일 진행되는 ‘그날 12·3 다크투어’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신속하게 비상장악 해제요구를 결의했던 그날의 밤을 기억하자는 취지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해설자로 나서 계엄 당시 월남 장소, 계엄군 헬기가 착륙한 국회 운동장, 계엄군과 극렬히 대치한 국회 의사당 2층 현관 등을 시민과 함께 둘러보며 설명할 예정이다.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벌써 1년이다. 불행한 과거를 기억하고 조속한 내란 청산을 통해 성숙한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여행으로 떠나보자. /김지을 사회부장 dok200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위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4 경 제 부 220-0648 사 회 부 220-0664 제 2 사 회 부 220-0680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24 예 향 부 220-0692 여 론 매 체 부 220-0661 사 진 부 220-0693 디 지 털 부 220-0697	〈FAX 222-8005〉 227-9600 220-0551 220-0536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